

#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황선필\*\*·조형태\*\*\*

---

| 목 차 |

---

I. 서론	43	V. 실증분석 :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68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45	1. 기술통계량	
III. 연구방법론	51	2. 회귀분석 결과	
IV.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현황 분석	56	VI. 결론	77
1. 정당별 후보자 현황			
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현황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주저자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 투고일 : 2025. 12. 30. 1차수정일 : 2026. 1. 20. 게재확정일 : 2026. 2. 5.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20대(2016~2020년)와 제21대(2020~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지방선거의 제한된 표본이거나, 일부 지역 후보자 또는 단년도 선거기간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0대, 제21대의 국회의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 정보를 수작업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후보자의 개인 특성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의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선거 결과 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납세액은 득표율 및 당선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반대로 체납액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을 후보자 평가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히 체납여부는 부정적 신호로 인식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 전수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 현황과 선거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정보공개, 납세 실적, 체납 실적, 선거 결과

## I. 서 론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공직자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재정과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세법 등 재정 관련 법률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심의·의결함으로써, 헌법에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납세의 의무 이행을 포함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문진주·강승모, 2016).<sup>1)</sup>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습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며, 과거 경험, 언론보도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투표 의사결정을 한다(조형태·황선필, 2018).<sup>2)</sup>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의 등록 등)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자료는 선거기간 동안 공개된다. 이러한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입법취지는 납세 실적 등의 후보자 정보를 공직자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재산 및 최근 5년간 조세 납부·체납 실적, 병역의무 이행 여부,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을 투표 전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희훈, 2010).<sup>3)</sup>

- 
- 1) 문진주·강승모,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세무회계연구』 50권,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83~101면.
  - 2) 조형태·황선필,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 공개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35~66면.
  - 3) 이희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정책』 제16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갑윤과 이현우(2002),<sup>4)</sup> 안문석과 황민섭(2002)<sup>5)</sup>의 연구에서는 주로 정당효과나 현직효과가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선중(2012),<sup>6)</sup> 문진주와 강승모(2016)<sup>7)</sup>는 납세 실적이 유권자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8)</sup>은 지방선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체납 이력이 존재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고, 윤지성과 송병권(2019)<sup>9)</sup>도 제7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체납이 득표율과 당선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거나, 일부 지역 후보자 또는 특정 선거기간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다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0대(2016~2020년)와 제21대(2020~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납세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0, 275~300면.

- 4) 이갑윤·이현우,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0, 149~170면.
- 5) 안문석·황민섭,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02, 227~253면.
- 6) 이선중,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2, 39~59면.
- 7)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 8)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 9) 윤지성·송병권,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189~215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연구는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2대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 전수를 대상으로 납세 및 체납 실적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후보자의 재산·학력·전과·군복무 등 공직선거법상 정보공개자료를 체계적으로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납세 및 체납 실적 자체의 독립적 효과를 식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납세 실적이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로서 유권자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후보자정보공개제도와 선거결과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계량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투표 행태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송건섭·이부희, 2008),<sup>10)</sup> 투표 행태의 설명 모형으로는 Shama(1976),<sup>11)</sup> Campbell et al.(1984),<sup>12)</sup> Newman and Sheth

10) 송건섭·이부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5~34면.

11) Shama A., Political Marketing : A Study of Voter Decision-Making Process and Candidate Marking Strategy, *Annual Proceeding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76, pp.764~777.

12)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Television Market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9(4), Wiley, 1984, pp.665~678.

(1985)<sup>13)</sup>모델이 대표적이다. Campbell et al.(1984)<sup>14)</sup>은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정당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후보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Shama(1976)<sup>15)</sup>는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체계와 유사한 후보를 선호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인지과정을 통해 후보자 요인이 투표결과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또한 Newman and Sheth(1985)<sup>16)</sup>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영역을 이슈·정책(issue and policies),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ry), 정서적 감정(emotional feeling), 후보자 이미지(candidate image), 시사(current events), 개인적 사건(personal events), 인식론적 이슈(epistemic issues)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 중 사회적 이미지는 인구통계학적(연령,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소득, 직업), 문화적/인종적 또는 정치적/이념적 연관성에 기반하여, 개인적 사건은 사생활을 포함한 후보자 개인적 특성에 기반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Wattenberg(2004)<sup>17)</sup>은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을 진실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능력·역량(capability), 카리스마(charisma), 외모(appearance), 인구통계적 특성(demographics)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진실성은 정직성과 성실성을 의미하며 부패(corruption)의 반대 개념이라 하였다. 또한 외모 및 인구통계적 속성에는 연령, 종교, 재산, 학력, 직업, 가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포함된다.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강조된 이론은 이른바 “현직효과”이며, 현직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13) Newman, B. I. and J. N. Sheth,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2),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178~187.

14)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op. cit.*, pp.665~678.

15) Shama A., *op. cit.*, pp.764~777.

16) Newman, B. I. and J. N. Sheth, *Ibid.*, pp.178~187.

17) Wattenberg, M. P., Elections : Personal Popularity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1), Wiley, 2004, pp.143~155.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어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Mayhew, 1974 ; Campbell et al., 1984).<sup>18)</sup> 우리나라도 특히 현직 국회의원 이점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제시하였다(송건섭 · 이부희, 2008).<sup>19)</sup> 김한나와 박원호(2016)<sup>20)</sup>는 제도적 효과보다 개인의 선거 경쟁력이 당선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일부 연구는 후보자의 연령이나 경력과 같은 후보자 개인 속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좌승희 · 한현욱, 2002).<sup>21)</sup>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sup>22)</sup>가 공개되면서 후보자 요인이 투표행태, 즉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안문석 · 황민섭, 2002 ; 이갑윤 · 이현우, 2002 ; 이

18) Mayhew, D. R., Congressional elections :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p.295~317 ;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op. cit.*, pp.665~678.

19) 송건섭 · 이부희, 앞의 논문, 5~34면.

20) 김한나 · 박원호,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권 제2호, 21세기정치학회, 2016, 51~76면.

21) 좌승희 · 한현욱, “한국 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 과제”, 『제도연구』 Vol.4, 한국경제연구원, 2002, 202~247면.

22)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순번	항목	내용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상황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복무분야 ·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3	납세 및 체납 실적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 · 학력 · 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출처 : 조형태 · 황선필,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 공개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35~66면.

선중, 2012 ; 송병권 · 윤지성, 2016 ; 윤지성 · 송병권, 2019 ; 문진주 · 강승모, 2016 ; 조형태 · 황선필, 2018).<sup>23)</sup>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선거 결과에는 일부 정보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문석 · 황민섭, 2002 ; 이갑윤 · 이현우, 2002 ; 이선중, 2012 ; 송병권 · 윤지성, 2016).<sup>24)</sup> 이갑윤과 이현우(2002),<sup>25)</sup> 안문석과 황민섭(2002)<sup>26)</sup>의 연구에서는 주로 정당효과나 현직효과가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선중(2012),<sup>27)</sup> 송병권과 윤지성(2016),<sup>28)</sup> 윤지성과 송병권(2019)<sup>29)</sup>은 후보자 전과기록이 득표율 및 당선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재산 및 납세 실적에 관한 연구는 이선중(2012),<sup>30)</sup> 문진주와 강승모(2016),<sup>31)</sup>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32)</sup>이 있다. 이선중(2012)<sup>33)</sup>은 체납여부가 유권자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고, 문진주와 강승모(2016)<sup>34)</sup>는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 중 일부 지역(부산 · 경남)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납세 실적이 선거 당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3) 안문석 · 황민섭, 앞의 논문, 227~253면 ; 이갑윤 · 이현우, 앞의 논문, 149~170면 ; 이선중, 앞의 논문, 39~59면 ; 송병권 · 윤지성,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85~107면 ; 윤지성 · 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 문진주 · 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 조형태 · 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24) 안문석 · 황민섭, 위의 논문, 227~253면 ; 이갑윤 · 이현우, 위의 논문, 149~170면 ; 이선중, 위의 논문, 39~59면 ; 송병권 · 윤지성, 위의 논문, 85~107면.

25) 이갑윤 · 이현우, 위의 논문, 149~170면

26) 안문석 · 황민섭, 위의 논문, 227~253면.

27) 이선중, 위의 논문, 39~59면.

28) 송병권 · 윤지성, 위의 논문, 85~107면.

29) 윤지성 · 송병권, 위의 논문, 189~215면.

30) 이선중, 위의 논문, 39~59면.

31) 문진주 · 강승모, 위의 논문, 83~101면.

32) 조형태 · 황선필, 위의 논문, 85~66면.

33) 이선중, 위의 논문, 39~59면.

34) 문진주 · 강승모, 위의 논문, 83~101면.

보았다. 반면,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35)</sup>은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을 전수조사하여 납세·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현 체납액이 존재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낮음을 밝혔으며, 후보자 본인보다 가족 명의 재산이나 납세 실적이 큰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윤지성과 송병권(2019)<sup>36)</sup>에서도 단년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해외 연구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정치인의 부패한 행위들이 유능하고 자기 진영에 혜택을 줄 것으로 인식(Kramon, 2016)<sup>37)</sup>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조세피난처 이용 같은 탈세 또는 부패 행위가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주장(Kolstad and Wiig, 2018, Peters and Welch, 1980 등)<sup>38)</sup>을 제기하였다. 한편, Galli et al.(2025)<sup>39)</sup>은 이탈리아의 시의원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이 제공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 현직 후보 중심의 조회 편향을 보임으로써 정보 제공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 실험 연구(survey experiment, field experiment)이거나 현직의원의 부패 혐의가 제기된 사례를 토대로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어서 국내에서와 같이

35)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85~66면.

36) 윤지성·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37) Kramon, E., Electoral handouts as information : Explaining unmonitored vote buying, *World Politics* 6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454~498.

38) Kolstad, I. and A. Wiig, How does information about elite tax evasion a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Tanzan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5, Taylor & Francis, 2018, pp.509~526 ; Peters, J. G. and S. Welch,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697~708.

39) Galli, E., G. Garzarelli, G. Pinto and M. Pulejo, Do voters use information on candidates?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recent election, *Public Choice*, Springer, 2025, pp.1~34.

실제 공식 선거 전에 동일기간에 공개된 후보자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는 아니다.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인의 납세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일관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단년도에 한정된 자료이거나 특정 후보나 실험에 근거한 결과이다. 따라서 다년간의 기간에 걸쳐 선거 전에 모든 후보에 대해 공개되는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납세성실도와 관련된 정보공개가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후보자의 정보공개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이전에 공시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과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인지적 처리 과정과 일치한다(Shama, 1976 ; Newman and Sheth, 1985).<sup>40)</sup> 헌법상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실한 납세는 공공성·청렴성·준법성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체납은 Wattenberg(2004)<sup>41)</sup>가 제시하듯 정직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부패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무책임성·도덕성 결함·사의 추구와 같은 부정적 속성을 시사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납세 실적과 체납 실적은 서로 상반된 방향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후보자의 납세 실적은 선거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1 : 후보자의 납세 실적은 득표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2 : 후보자의 납세 실적은 당선 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40) Shama A., *op. cit.*, pp.764~777 ; Newman, B. I. and J. N. Sheth, *op. cit.*, pp. 178~187.

41) Wattenberg, M. P., *op. cit.*, pp.143~155.

- 가설 2 : 후보자의 체납 실적은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1 : 후보자의 체납 실적은 득표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2 : 후보자의 체납 실적은 당선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제20대(2016년~2020년), 제21대(2020년~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개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그러한 이행 수준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상황, 병역 상황, 납세 실적,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보의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납세 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체납액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진주와 강승모(2016),<sup>42)</sup>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43)</sup>이 공통으로 지적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가족 간 재산 이전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상기 현황에서 파악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실적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개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고, 첨부파일을 열람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자료의 대량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자료의 열람기간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후보자공개자료를 각 선

42)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43)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거기간 동안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수작업(Hand collection)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자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www.nec.go.kr/>)에서 제공하는 선거통계 정보

본 연구의 목적은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이다. 선거공보자료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납세 실적을 확인하고 후보자 선택을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체납액, 납세액 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이선중, 2012 ; 문진주·강승모, 2016 ; 송병권·윤지성, 2016, 조형태·황선필, 2018 ; 윤지성·송병권, 2019)<sup>44)</sup>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회귀 분석을 수행하며, 당선 여부 등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lec = \beta_0 + \beta_1 Tax + \beta_2 asset + \beta_3 milit + \beta_4 crim + \beta_5 candi + \beta_6 party + \beta_7 politic + \beta_8 prof + \beta_9 scholar + \beta_{10} age + \beta_{11} gen + \beta_{12} assem + \sum REG \text{-----}(1)$$

<종속변수>

Elec : 선거 결과

vote\_ratio : 득표율

elec : 당선 여부 ; 당선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관심변수>

Tax : 납세 및 체납 실적

44) 이선중, 앞의 논문, 39~59면 ;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 송병권·윤지성, 앞의 논문, 85~107면 ;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 윤지성·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tax : 최근 5년간 납세액에 자연로그한 값  
 ar : 최근 5년간 체납액에 자연로그한 값

<통제변수>

asset : 재산에 자연로그한 값[자산의 값이 (-)인 경우 asset 값을 1로 함]  
 milit : 군복무 여부, 군필 = “1” 미필 = “0”  
 crim : 후보자의 전과경력 횟수  
 candi : 입후보 횟수  
 party : 여당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politic : 현직 국회의원 = “1”, 그렇지 않으면 “0”  
 prof : 전문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cholar : 후보자의 학력이 석사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age : 후보자의 나이에 자연로그한 값  
 gen : 후보자가 남자이면 “1”, 여자이면 “0”  
 assem : 20대 국회는 “1”, 21대 국회는 “0”  
 REG : 시·도 더미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 실적이며, 납세액(tax) 변수는 최근 5년간 후보자의 총 납세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성실한 납세의식을 대리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납세액이 많을수록 납세의무에 대한 준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종속변수인 득표율(vote\_ratio) 및 당선 여부(elec) 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체납액(ar) 변수는 최근 5년간의 총 체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이는 Wattenberg(2004)<sup>45)</sup>에서 언급한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 중 진실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성실한 납세 태도를 나타내며, 선거 결과(득표율 및 당선 여부)와는 음(-)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권자 선택이론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이미지,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후보자 개인적 사건 등이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 및 투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Campbell et al., 1984, Shama, 1976, Newman and

45) Wattenberg, M. P., *op. cit.*, pp.143~155.

Sheth, 1985, Wattenberg, 2004),<sup>46)</sup> 국내 실증연구 또한 후보자의 다양한 특성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안문석·황민섭, 2002 ; 이선중, 2012 ; 문진주·강승모, 2016 ; 송병권·윤지성, 2016 ; 조형태·황선필, 2018 ; 윤지성·송병권, 2019).<sup>47)</sup>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 및 체납 실적 이외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Newman and Sheth(1985)<sup>48)</sup>가 제시한 사회적 이미지 (social imagery) 영역이며, 연령, 종교, 재산, 학력, 직업, 가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포함된다(Wattenberg, 2004).<sup>49)</sup> 문진주·강승모(2016)<sup>50)</sup>는 병역의무와 성별, 연령, 학력은 선거 결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조형태·황선필(2018)<sup>51)</sup>의 연구모형에서 후보자의 재산규모가 득표 수 및 당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좌승희와 한현옥(2002)<sup>52)</sup>은 연륜을 중시하는 유권자 성향으로 인해 후보자의 연령이 당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전문직, 고학력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조형태·황선필, 2018).<sup>5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asset), 연령(age), 성별(gen), 군복무 여부(milit), 전문

46)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op. cit.*, pp.665~678 ; Shama A., *op. cit.*, pp.764~777 ; Newman, B. I. and J. N. Sheth, *op. cit.*, pp.178~187 ; Wattenberg, M. P., *op. cit.*, pp.143~155.

47) 안문석·황민섭, 앞의 논문, 227~253면 ; 이선중, 앞의 논문, 39~59면 ;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 송병권·윤지성, 앞의 논문, 85~107면 ;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 윤지성·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48) Newman, B. I. and J. N. Sheth, *Ibid.*, pp.178~187.

49) Wattenberg, M. P., *Ibid.*, pp.143~155.

50) 문진주·강승모, 위의 논문, 83~101면.

51) 조형태·황선필, 위의 논문, 35~66면.

52) 좌승희·한현옥, 앞의 논문, 202~247면.

53) 조형태·황선필, 위의 논문, 35~66면.

직 여부(prof), 학력(scholar)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전과기록(crim)은 도덕성과 준법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담고 있어 유권자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전과기록이 득표율 및 당선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으므로(이선중, 2012 ; 송병권 · 윤지성, 2016 ; 윤지성 · 송병권, 2019),<sup>54)</sup> 본 연구는 crim 변수를 포함하여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전과기록이 동시에 가지는 효과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정당요인과 현직 여부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Campbell et al., 1984),<sup>55)</sup> 현직 의원(politic) 또는 입후보 횟수(candi)는 언론 노출 빈도와 지명도, 지역구 관리 등에서 우위를 가지므로 선거 결과와 정(+의) 관계가 예상된다(Mayhew, 1974 ; Campbell et al., 1984 ; 송건섭 · 이부희, 2008).<sup>56)</sup> 국내연구에서도 여당 여부와 현직 여부는 일관되게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안문석 · 황민섭, 2002 ; 이선중, 2012 ; 김한나 · 박원호, 2016 ; 조형태 · 황선필, 2018).<sup>57)</sup> 따라서 여당 여부(party)와 현직 국회의원 여부(politic), 국회의원 입후보 횟수(candi)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국회 대수(assem)와 지역 특성(REG) 역시 선거 결과에 체계적인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가 치러진 시기, 이슈 구조가 상이하므로, 선거 대수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assem)를 포함하여 시기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정당 지지 기반, 지역주의, 경제 · 사회 여건 등 후보자 개인 특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고유의 효과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더미변수(REG)를 통제하였다(송병권 · 윤

54) 이선중, 앞의 논문, 39~59면 ; 송병권 · 윤지성, 앞의 논문, 85~107면 ; 윤지성 · 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55)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op. cit.*, pp.665~678.

56) Mayhew, D. R., *op. cit.*, pp.295~317 ;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Ibid.*, pp.665~678 ; 송건섭 · 이부희, 앞의 논문, 5~34면

57) 안문석 · 황민섭, 앞의 논문, 227~253면 ; 이선중, 위의 논문, 39~59면 ; 김한나 · 박원호, 앞의 논문, 51~76면 ; 조형태 · 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지성, 2016 ; 윤지성 · 송병권, 2019).<sup>58)</sup>

#### IV.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 현황과 납세 및 체납 실적을 분석한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개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첨부파일 열람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대량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자료의 열람기한도 제한되어 있다. 기본적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선거기간(14일) 동안만 공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20대(2016년~2020년) 및 제21대(2020년~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열람기간 내 수작업(hand collection)으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후보자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개요는

---

58) 송병권 · 윤지성, 앞의 논문, 85~107면 ; 윤지성 · 송병권, 앞의 논문, 189~215면.

다음과 같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2016년 4월 13일(수)에 실시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이다. 전국 선거구에 총 93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이 중 253명이 당선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수)에 실시되었으며,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다. 이 선거에서는 1,101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253명이 당선되었다.

## 1. 정당별 후보자 현황

<표 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후보자 현황을 나타낸다. 전국 253개 선거구에 총 934명이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은 3.69 :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개 선거구에 51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5.1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선거구에 9명이 등록하여 3 :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48명, 더불어민주당 234명, 국민의당 171명, 무소속 133명, 민중연합당 56명, 정의당 51명, 기타 정당 41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표 2>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후보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 253개 선거구에 총 1,101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은 4.35 :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8개 선거구에 4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5.25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청북도는 8개 선거구에 30명이 등록하여 3.75 :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36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35명, 무소속 116명, 정의당 75명, 민중당 59명, 민생당 58명, 우리공화당 41명, 기타 정당 28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 표 1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 현황

(단위 : 인원 수)

시도명	선거구수	후보자수	경쟁률	정당별 후보자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기타
합계	253	934	3.69	248	234	171	51	56	133	41
서울특별시	49	201	4.10	47	49	41	11	14	20	19
부산광역시	18	60	3.33	18	18	6	4	0	13	1
대구광역시	12	38	3.17	11	7	1	1	1	12	5
인천광역시	13	44	3.38	13	11	12	2	1	4	1
광주광역시	8	43	5.38	7	8	8	4	8	7	1
대전광역시	7	29	4.14	7	7	7	3	1	3	1
울산광역시	6	21	3.50	6	4	3	0	0	6	2
세종특별자치시	1	5	5.00	1	1	1	0	1	1	0
경기도	60	211	3.52	60	60	48	13	17	11	2
강원도	8	25	3.13	8	8	2	2	1	3	1
충청북도	8	26	3.25	8	8	5	1	1	2	1
충청남도	11	37	3.36	11	11	8	1	0	4	2
전라북도	10	47	4.70	9	10	10	3	2	12	1
전라남도	10	51	5.10	10	10	10	3	7	10	1
경상북도	13	34	2.62	13	6	1	2	2	10	0
경상남도	16	53	3.31	16	13	6	1	0	15	2
제주특별자치도	3	9	3.00	3	3	2	0	0	0	1

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배열순서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나머지 정당은(고용복지연금진화연대, 공화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진리대한당, 친반통합, 친반통일당, 친반평화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기타로 구분하였음.

< 표 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 현황

(단위 : 인원 수)

시도명	선거구수	후보자수	경쟁률	정당별 후보자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기타
합계	253	1,101	4.35	253	236	58	75	41	59	235	116	28
서울특별시	49	225	4.59	49	48	13	14	9	17	47	17	11
부산광역시	18	74	4.11	18	18	4	4	4	2	17	7	0
대구광역시	12	59	4.92	12	12	2	5	4	2	12	8	2
인천광역시	13	52	4.00	13	13	0	6	1	2	13	4	0
광주광역시	8	42	5.25	8	2	7	6	0	3	8	5	3
대전광역시	7	28	4.00	7	7	0	1	2	1	7	2	1
울산광역시	6	28	4.67	6	6	2	1	0	1	6	4	2
세종특별자치시	2	10	5.00	2	2	1	1	0	0	2	2	0
경기도	59	238	4.03	59	59	7	17	8	15	55	15	3
강원도	8	37	4.63	8	8	1	1	2	2	8	7	0
충청북도	8	30	3.75	8	8	3	1	0	1	8	0	1
충청남도	11	44	4.00	11	11	2	3	2	2	8	4	1
전라북도	10	44	4.40	10	4	6	4	0	1	7	10	2
전라남도	10	44	4.40	10	6	6	4	1	3	6	7	1
경상북도	13	58	4.46	13	13	1	2	2	2	13	12	0
경상남도	16	73	4.56	16	16	3	4	5	4	16	9	0
제주특별자치도	3	15	5.00	3	3	0	1	1	1	2	3	1

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배열순서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나머지 정당은(친박신당, 가자!평화인권당, 공화당, 국민새정당, 기독교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충청의미래당, 통일민주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기타로 구분하였음.

## 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후보자명부와 서면 제출된 세부신고내역으로 구분된다. 후보자명부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및 납세 내역을 합산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서면으로 제출된 세부신고내역은 후보자 본인 및 가족의 세목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및 체납 실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부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표 3>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최근 5년간 납세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소득세는 평균 1억 74만원, 재산세 557만원, 종합부동산세는 107만원으로 총 1억 739만원의 납세 실적을 보였다. 한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세는 2,569만원, 재산세는 277만원, 종부세는 34만원으로 총 2천 881만원의 납세 실적을 보였다. 이를 합산한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소득세는 1억 2,644만원, 재산세는 834만원, 종부세는 141만원으로 총 1억 2천 6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평균 1억 2,548만원, 재산세는 636만원, 종합부동산세는 117만원으로 총 1억 3,301만원의 납세 실적을 보였다. 한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2,315만원, 재산세는 284만원, 종부세는 36만원으로 총 2,636만원을 나타냈다. 이를 합산하면 후보자 본인과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소득세는 1억 4,863만원, 재산세는 920만원, 종부세는 153만원으로 총 1억 5,937만원에 이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7,976만원, 재산세는 49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98만원으로 총 8,565만원의 납세 실적을 보였다. 후보자 가족의 최근 5년간 평

균 소득세는 2,785만원, 재산세는 271만원, 종부세는 32만원으로 총 3,089만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평균 납세액은 소득세 1억 762만원, 재산세는 761만원,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총 1억 1,65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비율(%)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 전체의 납세액에서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납부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가족 전체 납부액의 약 78.85%를 차지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비중은 약 21.15%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납부 비중은 79.68%(가족 20.3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 또한 75.69%(가족 24.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재산세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부담 비중은 66.79%(가족 33.21%)로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0대 총선의 경우 후보자의 소득세 납부 비중은 84.42%(가족 15.58%), 재산세는 69.12%(가족 30.88%)로 나타났다. 반면, 제21대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소득세 납부 비중이 74.11%(가족 25.89%)로 낮아졌고, 재산세는 64.40%(가족 35.60%)로 나타나 가족의 부담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비중은 높으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자산 관련 세목에서 가족 명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경남·부산지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 재산보다 본인 외 가족 명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였던 문진주와 강승모(2016)<sup>59)</sup>의 연구,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일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60)</sup>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납세현황을 통해 추론한 가족 명의의 자산이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의 소득세 납부 수준만으로는 납세의무 이행 정도를 충

59)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60)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의 재산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61)</sup>

<표 3> 후보자 납세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본인	소득세	100,748	79.68	125,483	84.42	79,765	74.11
	재산세	5,574	66.79	6,362	69.12	4,905	64.40
	종부세	1,069	75.69	1,173	76.24	980	75.14
	소계	107,391	78.85	133,018	83.46	85,651	73.49
가족 <sup>주)</sup>	소득세	25,699	20.32	23,152	15.58	27,859	25.89
	재산세	2,772	33.21	2,842	30.88	2,712	35.60
	종부세	343	24.31	366	23.76	324	24.86
	소계	28,813	21.15	26,360	16.54	30,895	26.51
전체	소득세	126,447		148,635		107,625	
	재산세	8,345		9,204		7,616	
	종부세	1,412		1,538		1,305	
	총계	136,204		159,377		116,546	

주) 본인 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표 4>는 후보자의 체납현황을 분석결과이다. 해당 분석 역시 후보자의 서면제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후보자 본인과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체납 실적이 있는 후보자는 총 151명(7.42%)으로 나

61) 정호용(2020)에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조율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공직자의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설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1,424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934명 중 124명(7.42%)이 본인 및 가족이 체납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체납이 확인된 경우가 124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1,127만원이었다. 한편, 후보자 본인 체납액의 평균은 1,014만 원으로, 본인 체납의 경우(90명)가 가족 전체(124명)에서 약 72%를 보였다.

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1,101명 중 27명(2.45%)만이 체납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제20대에 비해 체납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 체납이 확인된 18명의 평균 체납액은 3,310만 원으로, 제20대 체납자의 평균(1,127만 원)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또한 가족 명의 체납(9명)의 평균액도 1,736만 원으로, 체납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체납 규모 자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신생 정당 후보자의 참여로 인해 체납 규모의 분포가 편중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권자 인식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가 후보자의 납세 성실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후보군의 다양화(출신 정당 수의 증가)가 체납액 수준에는 상반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 후보자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명, %)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본인	108	13,971 (741)	555,008	90	10,143 (740)	397,200	18	33,106 (941)	555,008
가족	73	8,789 (664)	200,620	64	7,583 (528)	200,620	9	17,366 (2,235)	117,953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전체	151	14,241 (935)	555,008	124	11,276 (917)	397,200	27	27,859 (1,290)	555,008
후보수	2,035			934			1,101		
비율	7.42%			13.28%			2.45%		

<표 5>는 낙선자 정당별 체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낙선자 중 체납 실적이 있는 후보자는 총 122명으로, 이 중 본인 명의 체납자는 86명(70.5%), 가족 명의 체납자는 56명(45.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20대 총선 낙선자의 체납자는 본인 70명, 가족 48명으로 총 98명(전체의 80.3%)이었으며, 제21대 총선 낙선자의 체납자는 본인 16명, 가족 8명으로 총 24명(전체의 19.7%)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당(37명)이 가장 많은 체납 낙선자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20명), 새누리당(18명), 무소속(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16명)은 제21대 총선에서만 참여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체납자 수를 보였다. 그 외 정의당(3명), 미래통합당(3명), 기타정당(3명), 민중연합당(1명), 민생당(1명) 등은 상대적으로 체납 규모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20대 대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자의 체납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지만, 일부 정당(특히 국민의당 및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군에서 체납 경향이 집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낙선자 정당별 체납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본인	가족	전체	본인	가족	전체	본인	가족	전체
Total	86	56	122	70	48	98	16	8	24
국민의당	27	17	37	27	17	37			
더불어민주당	11	12	20	10	12	19	1		1
무소속	15	10	18	14	10	17	1		1
새누리당	13	8	18	13	8	18			
국가혁명배당금당	9	7	16				9	7	16
기타	3		3	3		3			
미래통합당	2	1	3				2	1	3
정의당	2	1	3	2	1	3			
우리공화당	2		2				2		2
민생당	1		1				1		1
민중연합당	1		1	1		1			

<표 6>은 당선자 정당별 체납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체납 실적이 있는 당선자는 총 29명으로, 이 중 본인 명의 체납자는 22명(75.9%), 가족 명의 체납자는 17명(58.6%)으로 나타났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본인 20명, 가족 16명으로 총 26명이 체납 실적을 보였으며, 제21대 총선에서는 본인 2명, 가족 1명으로 총 3명만이 체납 실적을 보여, 당선자의 체납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14명)이 가장 많은 체납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11명), 국민의당(3명), 무소속(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0대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주요 정당이 전체 체납 당선자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 이력이 일정 부분 주요 정당 후보군 내에서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21대에서는 전체 체납 당선자가

3명(더불어민주당 3명)에 불과하여, 체납 경향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표 5>와 <표 6>의 결과는 체납 여부가 후보자의 정치적 경쟁력이나 선거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당선자의 체납 비율이 낙선자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체납 여부가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납세의무 이행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치적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6> 당선자 정당별 체납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본인	가족	합계	본인	가족	합계	본인	가족	합계
Total	22	17	29	20	16	26	2	1	3
새누리당	11	10	14	11	10	14			
더불어민주당	8	5	11	6	4	8	2	1	3
국민의당	2	2	3	2	2	3			
무소속	1		1	1		1			

<표 7>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의 체납액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체납 실적이 있는 당선자는 29명(전체 후보자 2,035명 중 1.43%)으로, 이 중 제20대가 26명(2.78%), 제21대가 3명(0.27%)으로 나타나, 제21대 총선에서 체납 후보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전체 당선자의 평균 체납액은 314만 원, 최대 체납액은 5,474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당선된 후보자 본인 명의의 평균 체납액이 400만 원(최대 4,978만 원)으로, 가족 명의 평균 18만 원(최대 137만 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주로 후보자 본인 명의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제20대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평균 체납액은 439만 원, 가족은 14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1대에서는 후보자 본인의 평균 체납액이 15만 원, 가족은 76만 원이었다. 앞서 <표 4>의 체납 후보자의 체납액의 평균액이 제20대 기준으로 본인 1,014만원, 가족 758만원이었고, 21대 기준으로 본인 3,310만원, 가족은 1,73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선자의 체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체납 후보자의 수와 체납 규모가 모두 감소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와 납세 성실성에 대한 유권자 감시 강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직선거 후보자의 체납 이력은 당선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체납 실적이 있는 후보자는 선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후보자에 대한 납세 관련 윤리적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7> 당선자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명, %)

구 분	전체			제20대			제21대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n	Mean (Mdn)	Max
본인	22	4,005 (694)	49,784	20	4,390 (778)	49,784	2	153 (153)	303
가족	17	184 (378)	13,764	16	147 (322)	13,764	1	766 (766)	766
전체	29	3,146 (657)	54,743	26	3,467 (660)	54,743	3	357 (303)	766
후보수	2,035			934			1,101		
비율	1.43%			2.78%			0.27%		

## V. 실증분석 :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본 장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납세 및 체납 실적은 후보자의 경제적 성실성 및 공적 책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는 유권자에게 도덕적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납세의 성실성이 높은 후보는 공공성·청렴성·준법성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여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득표율이 높거나 당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체납은 정직성과 성실성의 결여인 부패의 개념으로 인식되어(Wattenberg, 2004),<sup>62)</sup> 유권자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후보자의 납세액(tax), 체납액(ar)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납세성실도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1. 기술통계량

<표 8>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제20대 및 제21대 전체 후보 2,035명이나, 무투표당선인 1명<sup>63)</sup>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외한 2,0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후보자의 평균 득표율(vote\_ratio)은 0.24(즉 24%)로, 표준편차 0.22를 보여 후보자 간 득표율의 분산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당선여부(elec) 변수의 평균은 0.25로, 전체 후보자의 경쟁률은 4 : 1 수준이었다.

납세 관련 변수를 보면, 최근 5년간 납세액의 로그값(tax)의 평균은 9.66(중위수 10.21)으로, 후보자 간 납세 규모의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62) Wattenberg, M. P., *op. cit.*, pp.143~155.

6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기호 1번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

(S.D. = 2.58). 체납액의 로그값(ar)은 평균 1.00, 중위수 0으로,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또한 총재산 대비 체납액 비율(ar\_ratio)의 평균은 0.00, 최대값은 2.08로, 대부분 체납하지 않으나, 일부 체납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재산(asset)의 자연로그값 평균은 12.57이며, 연령(age) 자연로그값 평균은 3.97이다. 전문직(prof)인 후보자는 평균 0.10(10%)로 나타났으며, 석사 이상 학력(scholar) 보유자는 44%로 절반에 가까웠다. 성별(gen)의 평균은 0.85로 남성 비중이 약 85%로 나타나 남성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군복무 여부(milit)의 평균은 0.71로, 약 71%의 후보자가 군복무 이행자이며, 남성후보자가 85%인데 반해 군복무의 평균은 0.71로 면제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과횟수(crim)의 중위수는 0으로 전과가 없는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은 0.73회로 나타나 전과가 있거나, 여러 전과(10회)가 있는 후보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변수를 보면, 입후보 횟수(candi)는 평균 1.77회, 최대 16회로 나타났으며, 일부 반복 출마자(repeat candidate)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 소속 여부(party)의 평균은 0.25로, 전체의 약 4분의 1이 여당 소속이고, 현직 국회의원(politic) 평균은 0.19로, 표본 중 약 19%가 현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ssem변수(제20대 = 1, 제21대 = 0)의 평균은 0.46으로, 표본의 절반 가량이 제20대 선거 후보자임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표본은 중장년 남성 후보 중심, 군복무 및 고학력 비중이 높은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보이며, 납세 실적과 관련한 변수는 평균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후보자의 체납 및 고액 자산으로 인한 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술통계량(선거 결과)

Variable	Mean	S.D.	Min	0.25	Mdn	0.75	Max
vote_ratio	0.24	0.22	0.00	0.02	0.21	0.43	0.83
elec	0.25	0.43	0.00	0.00	0.00	0.00	1.00
tax	9.66	2.58	0.00	8.38	10.21	11.27	16.85
ar	1.00	2.59	0.00	0.00	0.00	0.00	14.04
asset	12.57	3.31	0.00	12.19	13.35	14.24	19.39
milit	0.71	0.46	0.00	0.00	1.00	1.00	1.00
crim	0.73	1.27	0.00	0.00	0.00	1.00	10.00
candi	1.77	2.06	0.00	0.00	1.00	3.00	16.00
party	0.25	0.43	0.00	0.00	0.00	0.00	1.00
politic	0.19	0.39	0.00	0.00	0.00	0.00	1.00
prof	0.10	0.29	0.00	0.00	0.00	0.00	1.00
scholar	0.44	0.50	0.00	0.00	0.00	1.00	1.00
age	3.97	0.18	3.22	3.89	4.01	4.09	4.47
gen	0.85	0.36	0.00	1.00	1.00	1.00	1.00
assem	0.46	0.50	0.00	0.00	0.00	1.00	1.00

주) 본 연구의 표본은 2,035명 이나, 무투표당선인 1명(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기호 1번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을 제외한 2,034개임.

<표 9> 상관계수 분석

	vote_ratio	elec	ar	tax	asset	milit	crim	candi	party	politic	prof	scholar	age	gen
elec	0.732***	1												
ar	-0.044**	-0.065***	1											
tax	0.498***	0.313***	0.113***	1										
asset	0.368***	0.232***	0.024	0.513***	1									
milit	0.079**	0.028	0.017	0.111**	0.089***	1								
crim	-0.149***	-0.094***	0.046**	-0.181***	-0.115***	-0.031	1							
candi	0.275***	0.182***	0.002	0.160***	0.113***	0.049**	0.039*	1						
party	0.520***	0.378***	-0.019	0.289***	0.197***	0.062	-0.068**	0.108***	1					
politic	0.493***	0.479***	-0.053*	0.284***	0.209***	0.02	-0.075**	0.305***	0.266***	1				
prof	0.056**	-0.052**	0.023	0.223**	0.087***	0.019	-0.096**	-0.068**	0.012	-0.156***	1			
scholar	0.261***	0.124***	0.058**	0.279***	0.255***	0.094**	-0.131**	0.113***	0.134***	0.085***	-0.039*	1		
age	0.175***	0.112***	0.074***	0.330***	0.277***	0.118***	-0.004	0.286**	0.111**	0.180***	-0.052**	0.185***	1	
gen	0.152***	0.060***	-0.005	0.113**	0.106***	0.647***	0.141***	0.093***	0.087***	0.025	0.034	0.093***	0.175***	1
assem	0.090***	0.046**	-0.007	0.032	0.039*	0.075**	0.004	0.050**	0.040*	0.061***	0.032	0.036	-0.090***	0.117***

<표 9>는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득표율(vote\_ratio) 과 당선 여부(elec) 간의 상관계수는 0.732( $p < 0.01$ ) 로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두 변수가 모두 후보자의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관심변수인 납세액(tax)은 득표율(vote\_ratio, 0.498)과 당선 여부(elec, 0.313)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납세의무 이행의 성실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체납액(ar)은 득표율(-0.044) 및 당선 여부(-0.065)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납세이력을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의 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입후보 횟수(candi)는 득표율 및 당선 여부와 모두 정(+)의 관계를 보여, 반복 출마 경험이 선거 결과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당(party)과 현직의원(politic)도 각각 득표율, 당선 여부와 강한 정(+)의 관계를 보여, 정당 및 현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직(prof) 변수는 득표율과는 약한 정(+) 관계를 보였으나, 당선 여부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학력(scholar)과 연령(age)은 각각 득표율 및 당선 여부와 정(+)의 상관을 보여, 고학력·고연령 후보가 비교적 좋은 선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gen)은 득표율, 당선 여부와 약한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 후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표본 특성(85%)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요인을 통제한 뒤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마다의 정치적 특색이 존재하므로 시·도 더미 변

수(REG)를 포함하여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득표율(vote\_ratio)과 당선 여부(elec)이며, 주요 관심변수인 납세 실적은 최근 5년간 납세액의 자연로그값(tax), 최근 5년간 체납액의 자연로그 값(ar)이다.

먼저, <표 10>은 납세 및 체납 실적과 득표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결과이다. 모형(1)은 납세 실적, 모형(2)는 체납 실적, 모형(3)은 납세 실적과 체납 실적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다. 전체 모형의 수정결정계수(Adj.R<sup>2</sup>)는 0.498~0.529 수준으로 후보자의 특성과 납세성실도가 득표율 변동의 약 5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통계량이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납세액의 자연로그값(tax)은 득표율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납세액이 큰 후보일수록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권자들이 납세이력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성실한 납세 이력은 후보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2)에서 체납액(ar)의 회귀계수는 -0.002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모형(3)에서는 -0.00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많은 후보일수록 득표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로, 유권자들은 납세의무 불이행을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납세성실도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납이 있는 후보는 정치적 신뢰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재산(asset)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여당(party) 및 현직 국회의원(politic) 변수는 모두 강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당 효과와 현직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직(prof)과 고학력(scholar) 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정(+ )의 부호로 나타나, 전문직 및 고학력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받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별(sex)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정(+ )의 관계가 나타나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보다 득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과횟수(crim)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과 경력이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ge(연령) 변수는 일관되게 음(-)의 부호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가 득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 납세 및 체납 실적과 득표율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_cons	0.175** (2.394)	0.083 (1.129)	0.163** (2.223)
tax	0.019*** (12.908)		0.020*** (13.248)
ar		-0.002* (-1.905)	-0.004*** (-3.546)
asset	0.006*** (6.485)	0.011*** (11.481)	0.006*** (6.277)
milit	-0.035*** (-3.382)	-0.032*** (-2.987)	-0.034*** (-3.307)
crim	-0.011*** (-4.737)	-0.014*** (-5.857)	-0.010*** (-4.459)
candi	0.012*** (6.234)	0.012*** (6.184)	0.012*** (6.191)
party	0.165*** (18.920)	0.180*** (20.357)	0.164*** (18.836)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politic	0.161*** (17.140)	0.179*** (19.023)	0.158*** (16.828)
prof	0.026* (1.951)	0.064*** (4.763)	0.026* (1.927)
scholar	0.040*** (5.365)	0.052*** (6.963)	0.041*** (5.474)
age	-0.084*** (-4.499)	-0.035* (-1.881)	-0.081*** (-4.310)
sex	0.078*** (6.265)	0.078*** (6.061)	0.076*** (6.124)
assem	0.011 (1.601)	0.012* (1.692)	0.011 (1.608)
$\sum_{REG}$	yes	yes	yes
F-value	141.752***	120.714***	136.402***
Adj. $R^2$	0.527	0.498	0.529
N	2,034	2,034	2,034

<표 11>은 국회의원의 납세의무 이행과 당선 여부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모형(1)은 납세 실적, 모형(2)는 체납 실적, 모형(3)은 납세 실적과 체납 실적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다. 로짓(Logit) 모형의 적합도 지표를 살펴보면, LR  $\chi^2$  값은 425~468 수준에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Pseudo  $R^2$  값은 0.279~0.300 수준으로, 납세 성실도 및 후보자 특성이 당선 여부를 일정 수준 설명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납세액의 자연로그값(tax)은 모형(1)과 모형(3)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결과와 일관되게 성실하게 납세한 후보자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데, 유권자에게 책임감·도덕성의 신호를 제공하여,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선거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체납액(ar)은 모형(2)

와 모형(3)에서 각각  $-0.061$ ,  $-0.078$ 의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규모가 큰 후보일수록 당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유권자들은 납세 불이행을 부정적 신호로 인식하며, 체납 후보를 도덕적 신뢰성이 결여된 인물로 평가하고 이를 투표행동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납세 및 체납 실적과 당선 여부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_cons	-0.275 (-0.180)	-1.802 (-1.233)	-0.340 (-0.223)
tax	0.284*** (6.304)		0.298*** (6.585)
ar		-0.061** (-2.451)	-0.078*** (-3.196)
asset	0.103*** (2.726)	0.245*** (3.569)	0.098*** (2.663)
milit	-0.361* (-1.941)	-0.331* (-1.797)	-0.336* (-1.793)
crim	-0.114** (-2.006)	-0.132** (-2.328)	-0.095* (-1.682)
candi	0.078** (2.306)	0.073** (2.141)	0.079** (2.330)
party	1.306*** (9.637)	1.426*** (10.444)	1.300*** (9.571)
politic	1.870*** (11.796)	2.009*** (12.098)	1.839*** (11.583)
prof	-0.558** (-2.374)	-0.160 (-0.685)	-0.578** (-2.434)
scholar	0.076 (0.564)	0.167 (1.226)	0.083 (0.612)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age	-1.570*** (-3.847)	-0.944** (-2.332)	-1.550*** (-3.794)
sex	0.566** (2.263)	0.495** (1.993)	0.524** (2.077)
assem	0.057 (0.443)	0.030 (0.232)	0.054 (0.419)
$\sum_{REG}$	yes	yes	yes
LR $\chi^2$	468.472***	425.090***	465.264***
Pseudo R <sup>2</sup>	0.296	0.281	0.300
N	2,034	2,034	2,034

## VI. 결 론

공직선거 후보자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와 가족간 재산이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는 등 시사점 있는 결과를 내긴 하였으나, 단년도의 제한된 지방선거 후보자공개자료를 활용하거나(조형태·황선희, 2018),<sup>64)</sup> 특정 지역·한정된 표본에 국한되어 분석하였다(문진주·강승모, 2016).<sup>65)</sup>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20대(2016~2020년)와 제21대(2020~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납세 및 체납 실적,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를

64) 조형태·황선희, 앞의 논문, 35~66면.

65) 문진주·강승모, 앞의 논문, 83~101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의 납세액(tax)은 유의하게 득표율 및 당선과 양(+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납세를 성실히 이행한 후보일 수록 유권자로부터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되어 선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체납액(ar)은 득표율 및 당선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체납 여부를 부정적 신호로 인식함을 보여주며,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조형태와 황선필(2018)<sup>66)</sup>의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과정에서 기존의 유권자 선택과 관련 모델(Shama, 1976, Campbell et al., 1984, Newman and Sheth, 1985)<sup>67)</sup>이 일관적으로 강조해 온 후보자 개인적 요인 중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Djankov et al., 2010 등)<sup>68)</sup>에서 정치인의 재산 소득 등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부패를 억제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치인이 당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선거 후보자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시체계는 제한된 공개기간에 서면자료 열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조회가 번거롭다. 따라서 납세·체납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하고, 열람기간을 확대하여 유권자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66) 조형태·황선필, 앞의 논문, 35~66면.

67) Shama A., *op. cit.*, pp.764~777;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op. cit.*, pp.665~678; Newman, B. I. and J. N. Sheth, *op. cit.*, pp.178~187.

68)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Disclosure by Politicians, *American Economic Journal : Applied Economics* 2(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0, pp.179~209.

둘째, 체납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 및 검증절차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체납액은 후보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목별 체납액의 신뢰성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 국세청과 선관위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별도 표기 또는 주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가족 명의 재산·납세정보의 공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과, 선거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비중은 높으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자산 관련 세목에서 가족 명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부 후보자가 재산 이전이나 명의 분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보자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의 가족 명의의 재산·체납정보를 후보자 본인과 동일 수준으로 공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공개 세목도 재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거기간 중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다년간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후보자정보공개 특히 납세 실적 공개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해당정보가 실제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후보자정보공개 제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선거 종류에 따른 후보자 납세 실적의 영향력 차이, 같은 후보의 여러 선거 결과를 통한 납세 실적과 당선가능성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여러 차수에 걸친 다양한 선거자료를 구축하여

후보자의 납세행태와 선거 결과 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추적·분석하여 납세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김한나·박원호,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권 제2호, 21세기정치학회, 2016.
- 문진주·강승모,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세무회계연구』 50권,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 송건섭·이부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 송병권·윤지성,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 안문석·황민섭,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 —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02.
- 윤지성·송병권,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 이갑윤·이현우,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0.
- 이선중,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2.
- 이희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0.
- 정호용,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실증적 판단 :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 조형태·황선필,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채납실적 공개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 좌승희·한현옥, “한국 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 과제”, 『제도연구』 Vol.4, 한국경제연구원, 2002.

## 2. 국외 문헌

- Campbell, J. E., J. R. Alford and K. Henry, Television Market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9(4), Wiley, 1984.
-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Disclosure by Politicians, *American Economic Journal : Applied Economics* 2(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0.
- Galli, E., G. Garzarelli, G. Pinto and M. Pulejo, Do voters use information on candidates?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recent election, *Public Choice*, Springer, 2025.
- Kolstad, I. and A. Wiig, How does information about elite tax evasion a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Tanzan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5, Taylor & Francis, 2018.
- Kramon, E., Electoral handouts as information : Explaining unmonitored vote buying, *World Politics* 6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Mayhew, D. R., Congressional elections :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Newman, B. I. and J. N. Sheth,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2),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Peters, J. G. and S. Welch,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Shama A., Political Marketing : A Study of Voter Decision-Making Process and Candidate Marking Strategy, *Annual Proceeding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76.
- Wattenberg, M. P., Elections : Personal Popularity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1), Wiley, 2004.

<Abstract>

**Tax Payment and Tax Arrears Records and Their Effects  
on Election Outcomes**  
— The 20th-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

Sunpil Hwang\* & Hyeongtae Cho\*\*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candidates' tax compliance influences voters' choices, using data from the 20th (2016~2020) and 21st (2020~2024)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local government head elections, candidates from specific regions, or particular electoral periods, indicat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nationwid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o measure the level of tax compliance, this study manually collects information on tax payments and tax arrears from the candidate disclosure data for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releas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addition, to control for individual candidate characteristics, information on assets, military service, criminal records, and education is incorporated, along with electoral outcome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election statistics system.

By decomposing tax compliance into candidates' tax payments and tax arrears, this study examines their effects on voters' choices. The results show that candidates' tax paymen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vote share and the likelihood of election, whereas tax arrears exhibit negative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oters use candidates' tax compliance as an evaluative signal of trustworthiness and integrity, and perceive tax arrears as a negative signa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candidates'

---

\* Primary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Global Business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tax compliance using comprehensive nationwide data covering two consecutiv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ddition, the findings provid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andidate disclosur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allow voters to assess candidates' morality and integrity, and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its improvement.

▶ **Key Words** : national assembly elections, candidate disclosure, tax compliance, tax arrears, electoral outcomes